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검수완박’ 그들만의 잔치

윤 학
변호사·흰물결아트센터 대표

검사가 잘 할 수 있는 게 뭘까? 범죄와의 싸움, 범죄인과의 싸움이다. 그런데 검사가 대통령이 되었다. 검사 출신 대통령이 무서운 것일까. 현 정권은 지금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밀어붙이고 있다. 국민들에게 “죄가 없으면 검찰 수사권을 박탈할 필요가 없는데 얼마나 죄가 많길래 저렇게 서두르지?”하는 의구심만 키워 주고 있다.

검수완박이 된다고 이미 지은 죄가 사라지겠는가. 누가 봐도 스스로 범죄자임을 자백하는 듯한 그들을 검사 출신 대통령이 그냥 두겠는가. 공직자 임명은 대통령 권한이니 베테랑 검사 몇 명만 경찰로 임명해 수사를 지휘하게 하면 정치인들에 대한 수사는 오히려 신속하게 진행될 것이다. 정권의 눈치를 누가 더 보던가.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도 정권의 뜻을 거슬러 조국 수사를 강행하지 않았던가. 검찰에는 또 다른 윤석열 검사가 얼마든지 남아 있다. 그런 뻣뻣한 검사들을 피해 경찰에게 수사를 전담시킨다니 정권 입맛에 맞는 정치적 수사도 더 쉬워져 차기 정권으로서는 얼마나 반가운 일인가. 검수완박은 차기 대통령에게는 ‘불감청고소원’(不敢請固所願)일 것이다.

며칠 전 검수완박 절충안에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극찬하여 국민 모두 어리둥절했다. 셈에 밝은 새 대통령의 뜻과 무관했을까? 민주당이 대통령 권한을 사실상 강화시켜주는 법안을 만들어 바친다는 데 굳이 마다할 필요가 있겠는가.

문제는 검수완박의 진짜 피해자가 국민인 바로 우리라는 점이다. 히틀러와 무솔리니가 그 막강한 권력을 휘두를 수 있었던 비결도 경찰력이었다. 당신이 범죄의 피해자가 되었을 때, 당신이 범죄의 피의자가 되었을 때 검찰과 경찰 중 누구의 수사를 받고 싶은가.

중학생 때 이발관에서 옆자리 손님이 시계를 잃어버렸다. 주인의 신고로 출동한 파출소 소장은 나를 범인으로 지목했다. 이발관에 주인과 손님 그리고 나뿐이라서 세 사람 중 훔쳐갈 사람은 나밖에 없다는 것이었다. 경찰은 사실대로 말하지 않으면 감옥에 보낸다고 했다. 이러다 감옥에 갈 수 있겠구나 공포감이 밀려왔다.

경찰은 아버지를 불러내 자백시키도록 종용했다. 아버지도 의심하는 것 같아 눈물을 뚝뚝 흘렸다. 오후 내내 암흑 같은 시간을 보냈는데 경찰이 슬그머니 나를 풀어주었다. 나중에 들었더니 그 손님의 옷에 그 시계가 있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나는 그 어떤 사과도 받지 못했다. 그때 검사가 시계 절도 수사를 했더라면 어땠을까?

그 후 변호사를 하면서 경찰의 법률 지식 부족 또는 친소 관계에 따라 가해자가 피해자로 둔갑하거나 나처럼 억울하게 죄인으로 몰린 사건을 수없이 변호하게 되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억울한 일을 당해도 검사에게 문서를 제출하여 사실을 바로 잡을 수 있었다. 그런데 검수완박으로 경찰의 잘못을 견제할 장치가 없어진다면 그 피해는 빽 없고 돈 없는 서민들의 몫일 수밖에 없다.

경찰은 요리하기가 쉽다고 자랑삼아 얘기하는 사람들을 종종 본다. 문제가 생겨도 빠져나올 방법이 있다는 것이다. 경찰도 선진화되었다고 하지만 힘 있는 자들에게서 피해를 입은 서민들의 억울함은 속출할 것이다. 법률 전문가가 아닌 경찰로서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지금 검수완박이 정권 간의 힘겨루기로 여겨져 국민들은 반대파와 찬성파로 갈라져 있지만, 경찰로 수사권이 넘어가면 결국 국민들만 심각한 피해를 볼 뿐이다. 두고 보라.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생겨날 것인지. 경찰의 수사권 남용을 그 누가 통제한다는 말인가. 검사들이 통제할 때도 수사권 남용이 많았는데 그런 통제 수단마저 없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는가.

검수완박 절충안을 선뜻 받아들였던 국민의힘을 보면서 나는 새 정권의 방향을, 새 대통령의 의중을 읽게 된다. 그가 진정 국민을 위해 고심하는 대통령일까? 갑작스런 검수완박 절충안 동의에 국민 여론이 심상치 않자 국민의힘은 서둘러 다시 반대하고 나섰고, 새 대통령은 국민투표를 검토하고 있다.

결국 국민들의 인권은 정치인이나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들이 스스로 지켜야 한다는 것을 이번 검수완박 사태가 똑똑히 말해 주고 있다. 대통령의 권한도, 국회의 권한도, 검찰과 경찰의 권한도 견제 없이는 예외 없이 타락하고 만다. 국민들이 깨어 있어야 대통령과 국회, 검찰과 경찰도 바른길을 간다.

※ 이 칼럼은 본사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종교칼럼

‘생명의 길 초록 발자국’

최 현 열
광주 온교회 담임목사

‘생명의 길 초록 발자국’은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교단의 한국교회 탄소중립 캠페인 설명회 책자의 표지글 제목이다. 기후 위기 시대에 교단 총회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결의하고 그 실천 사항들을 설명하고 협약식을 가졌다. 내용 중에 한반도 멸종위기 야생생물 목록이 있는데 멸종위기 1급이 60여 종, 2급은 207종으로 나온다. 차근차근 읽어 보니 처음 듣는 동물이나 곤충들의 이름도 있지만 나에게 익숙한 이름들이 훨씬 더 많았다. 물론 나열된 것들이 바로 멸종되어 버리는 것은 아니겠지만 너무 무관심했던 나를 일깨우기에는 충분했다.

나에겐 자연을 바라보며 마음 아팠던 순간들이 있다. 산불로 인하여 나무와 숲이 순식간에 타 버리고 검게 그을린 모습을 보았을 때, 강변을 걷다가 떼죽음을 당한 물고기들을 보았을 때, 유조선이나 큰 배들이 바다에서 좌초되거나 사고를 당하여 기름 유출로 인해 새들이나 동물이 기름에 범벅이 되어 죽어 가는 모습을 보았을 때이다. 산불의 경우는 자연 발화도 있으니 모두가 인재라고 볼 수는 없지만 우리나라에서 만큼은 대부분이 사람의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다고 할 수 있다. 이 외에도 해변가로 쓰레기가 얼마나 밀려 오는지 알 수 없다. 이렇게 내버려 두어도 되는 것일까? 우리의 후손들은 환경에 적응하며 살면 되는 것일까?

일본의 유명한 미야자키 하야오라는 애니메이션 감독이 있다. 그의 작품 중에 ‘원령공주’(모노노케 히메)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의 많은 작품들이 그렇듯 일본의 세계관과 다신적 종교관을 많이 반영하고 있어 기독교인들에게 블랙리스트 순위에 손꼽히는 것들이다. 그럼에도 이 영화는 자연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맞서 자연이 저항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해 준다. 인간이 개발을 통해 자연을 훼손하든 파괴를 하든 아무런 의미도 없이 사라져 가는 것이 아니라 저항하며 사라져 가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한다. 작가는 개발을 전적으로 막으려 한다기 보다는 가치 중립적인 태도를 보이는데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면 공존에 대한 것들도 검토하고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가 긴 고통의 시간을 보냈다. 완전히 그 이전의 삶을 회복한 것은 아니지만 많은 부분에서 제자리를 찾아가는 듯 하다. 그런데 그 기간 동안 자연 환경은 나아졌다는 글을 종종 보게 된다. 공기가 맑아졌다고도 하고 보이지 않던 동물들이 돌아왔다고도 한다. 이러한 사실들을 보면 인간의 이기심은 분명 자연을 훼손하고 있고 무분별한 개발 지향적인 태도는 부메랑이 되어 다시 돌아올 것이다. 자연 만물이 저항을 하든, 인간 스스로 자멸을 하든 그 끝이 암울한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기독교에는 사도신경이라는 교회의 공통된 신앙 고백이 있다. 그 고백의 첫 번째는 이렇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새 번역) 이 고백 속에는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는다는 신앙만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폭넓게는 창조된 것을 파괴하는 것은 결국 반신앙적 행위라는 것도 유추할 수 있다. 피조물이 인간만 있는가? 모든 자연 만물이 아닌가? 그런데 인간의 이기심으로 훼손하고 파괴를 일삼는다면 그것 또한 기독교 신앙을 올바르게 이행하지 못한다고 할 수 있겠다. 자연 환경을 아끼고 보존하고 가꾸어 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것이다.

창세기 9장 12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 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라는 구절이 있다. 이 말씀은 홍수 심판 이후에 하나님이 다시 약속하는 내용이다. 이 속에는 사람과 더불어 모든 생물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은 진정 우리 인간들이 자연과 더불어 잘 살아가기를 원하신다. 맑은 하늘, 에메랄드빛 바다, 두 손으로 움켜 마셔도 되는 맑은 계곡 물, 지저귀는 새들과 풀벌레 소리, 꽃, 푸르게 변하는 저 산들, 그리고 그 속에서 감탄하며 행복한 삶을 누리는 우리 모두를 보며 하나님은 웃으시지 않을까.

기 고

아들에게만 재산 상속, 남은 자식들 몫은

정 구 태
조선대 법사회대학 공공인재법무학과 교수

A는 슬하에 딸 B, C와 아들 D를 두었다. 그런데 A는 배우자를 먼저 여읜 뒤, 자신의 모든 재산 3억 원을 아들인 D에게만 증여하고 사망했다. A로부터 아무런 재산도 상속받지 못한 두 딸은 어떠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까.

사람이 사망하면 생전에 그에게 속하던 모든 권리와 의무가 특정인에게 넘어가는데, 이를 상속이라고 한다. 상속 제도가 인정되는 이유는 사유재산 제도가 인정되기 때문이다. 사람이 생존한 기간 동안에만 재산을 소유할 수 있다면 사유재산 제도는 사망할 때까지 재산을 단지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다는 것 이상의 의미가 없을 것이다.

상속에 의하여 재산을 후대에까지 넘겨줄 수 있을 때 비로소 재산을 온전히 사유한다고 말할 수 있다. 그렇다면 상속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우리나라 ‘민법’은 상속의 순위에 관하여 사람이 사망하면 그의 자녀가 가장 먼저 상속을 받고, 사망한 사람에게 자녀가 없으면 그 부모가 상속을 받으며, 사망한 사람에게 자녀도 없고 부모도 없으면 그 형제자매가 상속을 받고, 이들마저 존재하지 않으면 사망한 사람의 삼촌이나 조카 등이 상속을 받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는 사망한 사람의 자녀나 부모와 공동으로 상속하며, 사망한 사람에게 자녀도 없고 부모도 없으면 단독으로 상속인이 된다.

앞에서 든 예에서 사망한 A에게는 자녀 B, C, D가 있으므로 이들이 공동으로 A의 재산을 상속한다. 민법이 제정되어 시행된 1960년만 하더라도 남존여비 사상에 의해 딸의 상속분은 아들의 상속분의 2분의 1에 불과했지만(결혼한 딸의 상속분은 아들의 상속분의 4분의 1), 현재는 이러한 불합리한 차별은 모두 없어졌다. 그리하여 A가 남긴 재산 3억 원은 딸인 B, C와 아들인 D에게 각각 1억 원씩 똑같이 상속된다.

그러나 A가 사망하기 전 자신의 전 재산을 아들인 D에게만 증여함으로써 딸인 B와 C는 아무런 재산도 상속받지 못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B와 C에게는 어떠한 권리가 인정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한다면, 딸 B와 C는 아들 D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권을 행사하여, A의 증여가 없었다면 자신이 본래 받을 수 있었던 상속분(1억 원)의 절반에 해당하는 5000만 원의 재산을 각각 D로부터 반환받을 수 있다. 이처럼 사망한 사람의 생전 증여나 유증(유언에 의한 증여)이 있더라도 상속 재산 중 최소한의 몫(본래 받았을 상속분의 2분의 1 또는 3분의 1)은 상속인에게 유보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상속인에게 유보되는 상속 재산 중 최소한의 몫을 ‘유류분(遺留分)’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유류분 제도는 왜 인정되는 것일까. 사유재산 제도가 인정되므로 사람은 자신의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다. 그러나 자신의 전 재산을 상속인 중 일부에게만 증여 또는 유증함으로써 다른 상속인이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상속인 간의 공평을 깨뜨리는 것이다. 특히 앞에서 든 예처럼 사망한 사람이 아들에게만 재산을 증여 또는 유증함으로써 딸들이 아들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다.

다만 근래 들어 사망한 사람의 처분의 자유를 제한하는 유류분 제도가 정당한지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상속을 받지 않더라도 유족의 생계에 별다른 지장이 없는 경우까지 일률적으로 상속인에게 유류분을 보장해 줄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유류분 제도가 공익적 목적을 위한 기부에도 큰 장애가 돼 공공복리를 저해하는 측면도 있다.

현재 유류분 제도가 위헌인지 여부를 가려 달라는 심판이 제기되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과거에 여러 차례 유류분 제도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데, 시대적 분위기가 변한 오늘날에는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지 주목된다.

社 說

새 정부 균형발전 비전 낙후 지역 배려 없었다

윤석열 정부의 지역 균형발전 정책 청사진이 제시됐다. 지방분권·지방재정의 강화, 기업·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농산어촌 지원 등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방안들이 담겼다. 하지만 비수도권 시도 간 격차 개선이나 전남 등 낙후 지역을 위한 대책은 빠졌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 특별위원회는 그제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공정·자율·희망의 지방시대’를 열기 위한 지역 균형발전 비전 및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지역 주도 균형발전과 혁신성장 기반 강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지역 고유의 특성 극대화 등 3대 약속을 중심으로 15대 국정 과제와 76개의 실천 과제가 포함됐다.

가장 눈에 띄는 방안은 지자체가 자체 성장 전략에 맞춰 파격적인 세제 혜택과 규제 특례를 제공해 기업 이전을 유도하는 ‘기회발전 특구’(ODZ)의 지정·운영이다. 또 균형발전 특별회계 및 국고보조금 제도 개선,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 등 지자체들이 요구해 온 균형발전 방안들도 상당수 반영됐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지역 공약을 과제화한 시도별 7대 공약 및 15대 정책도 함께 발표됐다. 광주는 대한민국 인공지능(AI) 대표도시 조성, 미래 모빌리티 선도도시 구축, 광주 군 공항 이전 등이 포함됐다. 전남은 친환경 재생에너지 산업벨트 조성, 고흥 우주항공산업 클러스터 구축이 대표적이다. 광주시와 전남도가 추가로 건의한 송정역 복합 역사 건립, 국립 의과대학 신설, 신안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 등은 반영되지 않았다.

무엇보다 아쉬운 것은 갈수록 커지고 있는 지역 간 격차에 대한 고려 없이 전국 17개 시도에 사업들을 기계적으로 배분한 것이다. 더욱이 전국에서 가장 낙후된 광주·전남에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이나 제주 제2공항 및 신항만과 같은 대형 국책 사업도 없다. 인수위는 소멸을 걱정해야 할 정도로 뒤떨어진 지역부터 국가 재정을 우선 투입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정책을 보완해야 할 것이다.

문화 재정 확충으로 지역문화에 활력을

낙후된 지역문화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지역문화 진흥기금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공모사업 등에 대한 일회성 지원에서 벗어나 다년간 집중 지원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광역문화재단연합회와 전국지역문화재단연합회는 그제 광주문화재단에서 열린 ‘지역문화 정책포럼’에서 지역문화 재정 확충 등 5개 정책 목표와 15개 과제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제안했다. 이들 단체들은 제안서에서 “김대중 정부 이후 문화정책은 ‘집중에서 분산으로’ ‘중앙에서 지역으로’ 무게 중심을 옮기면서 문화 민주주의 시대로 전환됐다”며 지역문화 활성화에 대한 새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들이 무엇보다 강조한 정책은 지역문화 재정 확충이다. 여기에는 현행 부가가치세의 11%인 지방소비세 비중 확대와 지방세입 미과세 대상에 대한 과세 확대 등 지방소비세율 조정으로 지방문화세를 신설 편성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사실 열악한 지역 문화재정 실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미 수년 전부터 지역문화재단의 재정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광역 또는 권역별로 지역문화 진흥기금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끊이지 않았다. 현행 ‘지역문화진흥법’ 제2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 진흥기금을 설치할 수 있지만 광역·기초 자치단체의 참여율이 낮고 기금 규모도 적어 유명무실한 상태다.

모름지기 지방분권이 실현되려면 문화자치가 선행돼야 한다. 지역문화 정책이 지역문화 생태계와 선순환할 수 있도록 제대로 입안될 때 지역문화가 되살아나고 문화국가로서 위상도 강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수위는 지역문화 진흥기금 설치와 지역문화 재정 확충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지역문화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할 것이다.

無 等 鼓

해상 참사

바다에서 발생하는 선박 침몰 사고는 다른 재난과 달리 생존자가 거의 없는 대형 참사로 이어진다.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희생자가 나온 여객선 해상 참사는 ‘도냐 파즈호’ 사건이다. 1987년 12월 20일 밤 필리핀 국적 여객선 ‘도냐 파즈 호’가 유조선과 충돌, 무려 4375명이나 숨진 참사로 인류 역사상 최악의 여객선 침몰 사고로 꼽힌다. 침몰의 원인은 수차례의 구조 변경과 과적 및 정원 초과로 세월호의 사고 원인과 흡사하다.

전시에는 희생자가 5000명이나 9000명이 넘는 선박 침몰 사고도 있었지만, 군함 사고로 세계인에게 가장 잘 알려진 참사는 러시아의 핵잠수함 ‘쿠르스크호’ 침몰 사건이다. 인명 피해도 컸지만 그보다는 국가가 사고 원인을 은폐하고, 구조 과정에서도 무능을 드러낸 탓에 해상 참사의 대명사가 됐다.

쿠르스크호는 2000년 8월 12일 노르웨이 북쪽 바렌츠해에서 훈련 중 폭발로 침몰했다. 침몰 당시 러시아 정부는 노르웨이를 비롯해 여러 국가의 지원을 받아 구조 작업을 벌였으나 결국 사고 9일 만에 승무원 118명 전원이 사망했음을 발표했다. 당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끌던 러시아 정부는 사고가 나자 감추기에 바빴고, 사건이 서방 언론에 보도된 지 이틀이 지나서야 침몰을 인정했다.

문제는 침몰 이후 상당 시간 잠수함 내부의 승조원들이 생존해 있었을 가능성이 높았지만 러시아가 보안을 이유로 구조 작업에 늦장을 부렸고, 초기 서방의 구조 작업 제안도 거절했다는 점에 있다.

‘쿠르스크호’ 사고와 똑같은 상황이 러시아에서 22년 만에 되풀이됐다. 지난 4월 13일 흑해 함대 기함 ‘모스크바함’이 폭발로 침몰하자, 러시아는 화재가 원인이라며 전원 구조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장병 가족들의 항의가 빗발치자 9일 만인 4월 22일 “장병 한 명이 전사하고, 27명은 실종됐다. 나머지 396명은 대피했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가 쏜 미사일에 격침된 것이 기정사실화된 상태지만 러시아는 침몰 원인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고, 사망자 수에 대해서도 언론들은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전쟁 보도까지 왜곡하며 벌이는 러시아의 침략을 중단시키기 위한 세계적인 노력이 더욱 절실하다. /채희종 정치담당 편집국장 chae@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논설실장 程厚植 편집총괄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정치부 220-0652 예향부 220-0692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3
사회부 220-0642 체육부 220-0621
전남본부 220-0680
경영지원국 220-0515 〈FAX 222-800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기획관리국 227-9600 〈FAX 222-0195〉 업무국 220-0551 〈FAX 222-0195〉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